

동아시아의 미래, 역사분쟁을 넘어서

이 태 진

1. 서론 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비극
2. 서양세력이 오기 전의 동아시아의 각국(各國) 중화주의(中華主義) 5. 21세기 거대 중국의 중화의식(中華意識)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위협
3. 國際法 수용 후에 전개된 각국 중화주의의 변형적 상황 6. 결론: 동아시아의 국제관(國際觀)과 국제관계 재확립의 길
4. 일본의 아시아 맹주(盟主) 제창과 20

1. 서론

고마바 캠퍼스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일본학생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귀중한 기회였다. 초청해 주신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也) 선생과 나카지마 다카히로(中島隆博) 선생, 기타가와 사끼코(北川東子)선생, 히데 이시구로(ひて石黒) 선생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한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진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어진 보람을 느꼈다.

내 강의의 주제는 UTCP(The University of Tokyo, Center for Philosophy)의 “역사, 법, 폭력”이란 프로젝트에 맞추어 “근대한일관계사에서의 법과 폭력”으로 정했으며, 이 강의를 통해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하는 동안 근대화 시켜 주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자력 근대화의 기회를 박탈했던 것이며, 한국병합에 대해서도 일본측에서는 합법이란 주장이 많으나 실제로는 질차상의 탈법이 여러 번 저질러지고 무력으로 한국측을 위협해서 조약을 강제 체결했기 때문에 조약 자체가 성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조약문 하나하나를 함께 보면서 얘기했다.

동아시아 3국 중, 지금까지 이웃나라의 역사에 대해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일본뿐이었다. 일본에서 한국병합의 합법성, 식민지 근대화론에 관한 발언이나 출판물들이 끊임없이 나와 양국 간에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2년 전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빛은 물의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교과서 채택 시기인 2005년 5월을 앞두고 이 교과서를 만든 측에서 적지 않은 물의를 불러 일으킬 것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이 또 한국 고대사의 중요 부분인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고구려는 중국 고대의 수(隋), 당(唐) 제국이 주적(主敵)으로 삼아 세 차례나 큰 전쟁을 치룬 상대이다. 그런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니, 한국인들로서는 놀랍기보다도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 상황에 직면해 나는 그간 한일 간에 빚어진 역사분쟁도 본래 한일 양국만의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국이 뒤늦게 역사분쟁에 뛰어들어 가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동안의 한일 간의 역사분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국가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 또는 대립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그 현재적 상황이 어떤 역사성을 가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오늘 강연은 이에 관한 나의 소견을 밝히는 자리가 되겠으며, 이것은 어쩌면 나의 이번 초청 강의의 최종적인 결론이 될지도 모르겠다.

2. 서양세력이 오기 전의 동아시아의 각국(各國) 중화주의(中華主義)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분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300년 전 정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체제(朝貢冊封體制)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의 대명사나 마찬가지다. 이를 부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중국 천자가 주변

나라들의 왕위를 책봉하는 형식을 통해 각 국가의 존재가 인정되고 공존 관계가 성립, 유지되었다. 주로 평화시대의 국제질서로 기능한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체제는 북방민족으로부터, 또는 일본으로부터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의 질서로서 장기간에 걸쳐 존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 중심이 한족(漢族)이 아닌 북방족으로 바뀐 경우는 있었지만, 이 체제가 뒤엎어지거나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진 적은 없다. 그것은 유럽 중세의 신성(神聖) 로마제국 체제에 견줄만한 규모와 지속성을 가진 것이었다. 다만 신성로마제국 체제에 비해 주체의 일방성이 훨씬 강한 차이가 있지만, 국제질서로서의 기능성은 비슷하였다.

조공책봉체제에서 중국은 중화(中華) 곧 문명의 중심을 표방하면서 중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18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 각국이 모두 자국을 중화로 자처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은 청조(淸朝)의 여진족이 문화적으로 열등한 종족이었다고 해서 중국 한족이 이룬 중화의 문명은 이제 조선에서만 계승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朝鮮) 중화(中華)를 내세웠다. 그리고, 일본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가(天皇家)를 가지고 있는 나라야말로 바로 중화라고 했다.

월남(越南)도 19세기 초에 중화를 자처하면서 주위국들을 상대로 조공책봉 체제를 만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청조 자체도 중화의 해석을 새로이 시도한 점이다. 즉 옹정제(雍正帝, 1723-1736)는 문무(文武)가 온전하게 갖추어진 상태가 곧 중화라고 하여, 한족이 문덕(文德), 여진족이 무공(武功)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화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중화에 대한 각국의 해석은 차이가 있지만, 각국 중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조공책봉체제가 무너지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의식상으로는 그랬다. 흥미로운 것은 그 시기가 바로 신성로마제국의 해체기와 오버랩된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신성로마제국은 1648년 웨스터 팔리아 조약으로 해체의 방식에 대한 기본 합의를 보고, 19세기까지 때로는 폭주하듯이 때로는 느린 속도로 해체가 진행되었다.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신성로마제국은 해체의 방식으로 국제법을 만들어 간 반면, 동아시아의 각국 중화주의는 국가

간의 개별의식, 독존의식이 높아져 가면서도 새로운 관계의 틀이나 룰을 만드는 데 소극적이었다.

동아시아 3국은 이렇게 서로 자국 중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19세기 초반부터 서양 열강국(列強國)이란 손님들을 맞게 된다. 이 손님들은 기계 문명의 위력, 국민국가로서의 단위성, 그리고 국제관계의 룰 등으로 무장한 힘센 존재였다. 이 손님들은 우세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그들이 만든 국제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면서 고압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동아시아 각국은 전통적 조공책봉체제의 구심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각국 중화주의의 어떤 새로운 룰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손님들의 방식에 그냥 끌려가는 형세를 면치 못했다. 한 시기의 낙후성이 비싼 값을 치루기 시작하는 장면이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차이가 이후 오랫동안 개선되지 못한 점이다. 19세기 이래 동아시아 각국은 서양 국제법과 그 질서에 대해 계속 피동적이었다. 동아시아 자체의 전통적 국제관계의 기본정신을 찾아 서양세계가 만든 국제법에 반영하려거나, 법 실행에서 동아시아적 관행을 법 규정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 같은 것이 전무하였다. 오로지 서양의 국제법을 이해, 추종하는 데 급급했다.

동아시아 세계의 역사적 장구성에 비하면 너무나 피동적인 장면이 연속하는 상황이었다. 근현대 동아시아세계는 그만큼 국제관계 확립을 위한 노력에 능동적이지도 창의적이지도 못했다. 오늘날 빛어지고 있는 한일간, 한중간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분쟁은 이 미숙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國際法 수용 후에 전개된 각국 중화주의의 변형적 상황

그러면 100여 년 전, 서양 국제법 질서에 처음 접했을 때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의 실상을 보자. 서양세력의 위협에 직면하여 淸國과 明治 일본은 서양 세력에 대해 직접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똥하게도 이웃 조선의 영토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는 경쟁을 벌였다.

메이지 일본은 초기부터 한반도를 차지해야 일본이 산다는 이른바 정한론

(征韓論)을 공공연히 부르짖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영향력 때문에 당장에 나설 수는 없었지만 열기는 대단했다. 그런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이 서양 국제법 세계를 직접 한 바퀴 돌아보고 온 뒤에는 부분적으로 생각을 고쳐 먹었다. 서양 국제법 세계에서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는 주장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이 돌아온 후로는 이 용어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1880년대에는 청국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속방화(屬邦化) 정책을 펴기도 했다. 서쪽에 월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한반도마저 그렇게 되면 중국의 세력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 방파제 구축작업으로 조선 속방화 정책을 폈다.

일본은 1880년대 중반까지 근대국가로서의 기초를 잡은 다음, 군사력 증강에 전력을 쏟아 1890년대 중반에 드디어 청국과 한판 전쟁을 벌여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 행사의 기회를 얻는 듯했다. 그러나 서양 열강국의 견제로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뒤로 다시 미루어 졌다.

국제법 수용 초기에 벌어진 동아시아 3국간에 벌어진 이상과 같은 상황은 도대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서로 인접한 국가들이 위협적 존재라고 한 서양 열강국보다 먼저 한반도에 대한 침략 경쟁을 벌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은 국제법 수용 초기에 이 법을 강자가 약자를 먹는 법이라고 해석했다. 국제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한반도 침략을 서둘렀던 것일까? 1880년대의 수준에서 일본은 아직 국제법 학회도 발족시키지 않은 상태이니 그런 말은 할 수 없다. 청국의 조선 속방화 정책도 실은 새로운 국제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조공책봉관계를 주종(主從) 관계로 왜곡해서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 그런 정책을 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한반도에 대한 침략적 행위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사적 실태에서 본다면 그것은 18세기 이래의 동아시아 각국 중화주의의 독존(獨尊) 의식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 기존의 이 의식이 서양세력의 도래란 새로운 조건아래 변증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변증현상의 주된 원인은 서양 국제법에 대한 편의적 해석이나 그에 대한 거식(拒食) 증세였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일본의 경우, 18세기 이래 내부적으로 자라온 자존의식이 서양 국제법의 폭력성의 일면에 예민하게 조용하여 조선침략의 근거를 얻으려 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청조는 그 국제법이란 것이, 이미 힘을 잃은 조공책봉체제를 완전히 대신하고 들어서게 될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 마지막 안간힘으로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재강화시켜 보려 했던 것이다. 이때 청국은 국제법이 정하는 조약이 아니라 天子의 칙령으로 조선의 종속관계를 강화하려고 했다.

19세기 후반,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의 침략 경쟁은 결코 근대적인 국제관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양국의 침략 대상이 된 조선이 취하고 행한 것이 신사조에 부합하는 면이 많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조선의 군주 고종(高宗)은 1873년 12월에 아버지 대원군의 집권을 중단시킨 뒤,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일관해 취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는 아버지가 ‘황(皇)’, ‘칙(勅)’의 문구가 있다고 거부한 일본의 국서(國書)를 접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히고 일본과는 언제라도 국교를 수립하겠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것이 조선이 사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1876년 2월의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운양호(雲揚號) 사건에 대한 일본측의 응징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 정부의 능동성으로 쉽게 이루어 졌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조선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택해 서양 국제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모범적인 국교를 수립해 보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1882년 4월에 조인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은 실제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30%까지 정하여 관세자주권(關稅自主權)을 실현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본격적인 국제법 세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조선정부는 중국과의 오랜 관계도 정리하려고 했다. 그래서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앞두고 텐진, 베이징으로 사람을 보내 지금까지의 왕래사신(往來使臣) 제도를 중단하고 상주사신(常駐使臣) 제도 곧 공사(公使) 제도를 시행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청조는 조선에게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권장하는 입장이었지만,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것

은 불가능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딜레마였다. 중국, 조선, 미국 3국 간의 국제법적 조약 관계에서 볼 때 조선의 공사제도 제안은 정당하면서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조선의 이탈을 눈앞에 두고 중국은 이성을 잃다시피 하였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조선에서 개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정변(임오군란)을 일으키자 청국은 그 주모자 색출을 명분으로 6,000여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에 대한 강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조선은 청조의 강압 속에 많은 것을 잃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을 통해 실현시켰던 관세자주권도 이후 관세율이 크게 삭감되고 말았다. 갈수록 심해지는 청조의 압박을 견제해보려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보기도 했다. 주목되는 것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조선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여 타국과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계속 보인 점이다.

조선은 1885년부터 1899년까지 7차에 걸쳐 외국과 체결한 조약들을 사항별로 정리한 ‘약장(約章)’이란 이름의 일람서(一覽書)를 편찬, 간행했다. 이것은 중국, 일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한번 체결한 조약은 有利, 不利 간에 실무에서 관리들이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편찬, 간행의 취지였다. 조선의 관리, 지식인들도 국제법은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처럼 힘이 약한 나라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상대국과의 관계를 성실(誠實)로서 신뢰를 쌓는 것밖에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성실로서 상대에게 신뢰를 보이면 상대국도 우리를 신뢰하게 되어 이로써 양국의 영원한 우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1880년대 조선이 보인 국제법 질서에 대한 자세는 분명히 일본, 중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물론 그것은 조선 스스로 자신이 사는 길을 찾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제법 본래의 정신에 가장 근접한 것이었다. 국제법을 뒤늦게 수용한 동아시아에서도 이런 수용의 자세가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로 전개되었고, 그 속에서 이런 원칙론은 묻혀 버리고 말았다.

4. 일본의 아시아 맹주(盟主) 제창과 20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비극

1880년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청국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조선에 대한 속방화 정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양 국제법 질서의 도전이란 달갑지 않은 현실 앞에 다른 대책이 없어 옛 권위를 다시 한번 휘둘러 본 것에 불과하다. 이 복고주의(復古主義)는 지지자(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일본은 섬나라란 자연 조건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지니고 내려오면서, 오히려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소극적이거나 외면하는 태도를 일관해 왔다. 그러던 일본이 메이지 시대에 서양세력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란 명분으로 아시아 연대론(連帶論),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 등 스케일이 큰 질서체계를 내세운다. 이것은 독일의 대독주의보다도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서 것이기 때문에 서양으로부터의 영향으로 볼 수도 없다. 연원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시아 연대론 류의 동아시아관은 시대에 따라 이런 저런 형태로 표출되다가 소화(昭和) 시대에는 군국주의와 결합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營圈)의 논리로까지 발전했다. 이런 종류의 동아시아관은 처음부터 일본이 맹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그것은 20세기 일본의 팽창주의의 실체로서 그 연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 연대론 류는 곧 아시아의 질서를 중국이 아니라 일본 중심으로 다시 짜자는 것으로, 그 발상에는 과거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체제가 의식된 점도 인정된다. 같은 체제이되 주역을 바꾸자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을 만들자는 주장이 일본의 어떤 경험에서 나올 수 있었던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주목해 볼만한 것이 1871년에 단행된 폐번치현(廢藩置縣)의 조치이다.

나는 지난 10여 년 간 근대 한일관계사를 공부하면서 메이지 일본의 지도자들이 왜 처음부터 정한론을 생각했는지가 큰 의문이었다. 그것이 곧 근현대 동아시아 비극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시아 연대론 류는 실은 정한론의 한 변형일 뿐이다. 스케일을 좀더 키운 동일한 성격의 주장이다.

이 의문에 대해 잠정적으로 도달한 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전까지는 막번체제(幕藩體制)였다. 이 체제 아래 국(國)의 세계는 번(藩) 단위였다. 쇼군에 대한 충성보다 번주(藩主)에 대한 충성이 곧 애국(愛國)이었다. 이런 의식 속에 살던 대소의 무사들이 폐번치현 속에 충성을 바칠 주인 찾기에 대혼란이 야기된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물론 귀결점은 천황에 대한 충성체제이지만, 작은 단위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의 당혹감, 심리적 방황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지도자급 인사들 사이에 팽배한 정신적 흥분상태이다. 메이지 전반기에 정치적 요인들에 대한 테러와 암살사건이 빈발했던 것은 정신적 흥분상태의 실재(實在)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 흥분상태까지 유발하는 동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전하면서도 가장 하기 쉬운 말은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복에 관한 담론이다.

정한론은 실제로 누구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끼어 들 수 있는 담론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1873년 서구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유신 핵심세력은 이런 타국 정복본이 국제법 세계에서 대단히 위험시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새 본국에 머물면서 영향력을 키운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존재도 부담스러웠다. 사절단은 귀국하자마자 정한론이란 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를 전형적 정한론자로 몰아 거세한 다음, 표면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담론의 사회적 토대는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아시아 연대론, 대동합방론 등이 등장했던 것이다.

폐번치현의 조치는 이와쿠라 사절단이 떠나기 직전에 취한 것이다. 이 조치는 번주에 대한 충성체제를 천황에 대한 것으로 바꾸는 대개혁이었다. 이것이 정착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렸지만, 아시아 연대론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미 체제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작은 세계들을 합쳐 새로운 하나의 큰 세계를 만든, 일본사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이 경험이 아시아 연대론의 발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18세기 이래의 일본의 국수적 중화의식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정한론이 아시아연대론으로 변신하는 과정에 대한 파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의 자존적 ‘중화주의’가 이로써 국제주의로부터는 더욱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각국 중화주의는 시대여건으로 보아 새로운 국제주의의 틀로 발전시켜야 할 대상인데, 일본에서 전개된 상황은 반대로 국수적 성향을 더 강화해서 국제주의로부터는 더 멀어지고 있었다. 서양 문명 수용에서 가장 앞선 일본이 이렇게 되는 것은 곧 동아시아의 각국 중화주의가 개선 발전될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 21세기 거대 중국의 중화의식(中華意識)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위협

민두기(閔斗基)는 20세기의 동아시아의 역사를 “조급증(躁急症)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일본은 탈아론(脫亞論)과 무사도(武士道) 두 가지의 정신 자세로 역사를 끌어 열강의 대열에 서려고 했다. 이 욕구는 군국주의로까지 발전하여 끝내는 동아시아 세계를 전장으로 만들었다. 조급증이 어느 나라 보다 강렬했던 역사였다. 한편 중국은 양무운동(洋務運動), 변법운동(變法運動) 등에서 실패하면서 일본의 공세에 더욱 몰리다가 공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급진주의로 밖에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여기에도 일거에 해결책을 얻으려는 조급증의 심리가 작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급으로 치달은 역사에서 국제적 공존에 대한 배려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18세기 이래의 각국 중화의식은 자국 자존의 의식상태에 그대로 머물거나 더 악화되어 갔다. 1945년 종전 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1950년대에 접어들어 36년간의 한국 통치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계속하였다. 같은 내용이 역사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대물림을 하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동안 냉전체제의 중심국의 하나로 국민국가 단위의 자존의식을 발휘할 계제가 없었던 중국이 뒤늦게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면서 역사분쟁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이 일으키는 역사분쟁은, 과거에 공산주의 세계혁명 이론에 따라 끌어안았던 소수민족 처리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국민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기왕에 끌어안은 소수 민족들을 지금 방출할 수는 없는 것이 중국의 고민인 것 같다. 중국은 지금 소수민족에게 다 같은 하나의 국민이란 아이덴티티 부여의 길을

택하고 있으며, 이 목적아래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영토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역사 끌어안기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역사 수립체계는 누가 봐도 비역사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 끌어안기는 거대공정(巨大工程)의 프로젝트로 진행중이라고 한다. 고구려사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은 4방면의 이름을 붙인 거대 프로젝트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한다. 이 정책은 형식이나 내용 양면에서 과거 조공책봉체제 시대의 중국의 의식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을 주어 더욱 걱정스럽다. 100여 년 전 서양세력의 위협 앞에 조선을 상대로 취한 시대 역행의 속방화 정책의 재현을 느낀다고 한다면 너무 과민한 반응일까. 200년 여 전에 등장한 동아시아의 각국 중화주의는 상호 공존의 논리를 개발하여 세련시켜 나가야 할 동아시아 세계 전체의 과제였다. 이미루어진 숙제를 분발해서 실현시켜나가야 할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 프로젝트는 그 시대 역행성 때문에 더욱 큰 곤혹성과 당혹감을 자아낸다.

동아시아는 지난 한세기 동안 크게 변했다. 정치체제상 아직도 냉전체제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실현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고, 한국도 분단상태인데도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중국도 뒤늦게 자본주의경제로 진입했지만,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의 이런 경제성장은 원활한 국제관계로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은 이 점에 대한 대책 강구에 아주 소홀하다. 필요성을 느끼는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역행적인 현상으로 역사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강연이 18세기 이래의 동아시아 각국 중화주의로 시작한 것은 시대 역행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미숙성의 근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19세기 이후 서양이 동양을 앞지른 데는 기계문명의 발달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처리운영 시스템의 우위도 큰 몫

을 한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각국의 서양관은 주로 전자를 중심으로 하고 후자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전자에 대한 자각만으로 그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더라도, 후자가 결여되어서는 서양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후자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과제는 18세기 각국 중화주의의 대두에서 이미 제기된 것이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면의 성과는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현재의 역사분쟁의 양상으로 보면, 이 과제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는 한계선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일국(一國) 중심의 이해관계로만 나아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있다. 지난 세기의 영광에 대한 일본의 집착에 이어, 중국의 소수민족 끌어안기를 위한 거대 프로젝트는 1880년대에 한반도 차지를 위해 벌인 양국의 경쟁이 재현되어 가는 느낌을 준다.

동아시아의 젊은 세대 사이에는 지금 한류(韓流), 온사마 열풍이 일고 있다. 이런 교류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분쟁은 권력을 쥐고 있는 기성세대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6. 결론: 동아시아의 국제관(國際觀)과 국제관계 재확립의 길

동아시아 각국의 기성세대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인들이 먼저 현 상황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대로 가질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체제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모두라고 생각하는 반면, 일본 지식인들은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일본의 힘이 발휘되었을 때의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현대적인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나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역사인식 때문이라고 본다. 자국의 우위만을 의식한 이런

역사인식은 상황을 오도할 위험성이 아주 크다.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18세기 각국 중화주의 자체를 알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 동아시아의 각국 중화주의는 근대국가의 국제관에 다가가는 미완의 근대적 의식인데, 이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높이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18-19세기 한국사에서는 지식인 개인의 경우, 문화적 자존의식인 조선 중화의 수준을 넘어선 예가 발견된다. 18세기 후반의 홍대용(洪大容)은 천하에는 내외(内外)의 구분이 없고, 각기가 저희 사람들을 친히 여기고, 각기가 저희 군왕(君王)을 높이며, 각기가 저희 국가를 지키고, 각기가 저희 습속(習俗)에 편안해 하니, 화(華)와 이(夷)는 마찬가지로”라고 하였다. 국가 간의 상호 존중 의식이 강하게 묻어난 발언이다.

19세기 초반의 대표적 지식인인 정약용(丁若鏞)은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일본은 중국과 서로 무역을 하여 예의(禮義)와 문물을 일으켜 과거의 노략질하는 습속이 없어졌으며, 중국 강소(江蘇)와 절강(浙江) 지방을 통하여 중국의 물화(物貨)를 구하고 제조하는 방식을 배워 생활을 유족하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이 중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예의와 문물을 획기적으로 발달시켜 화(華)의 세계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일본, 중국의 18-19세기의 인물 가운데도 이들과 비슷한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있을 것이다. 배타적 자존의식의 선을 넘어선 공존, 공생을 지향하는 각국 중화의 사상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오늘의 지식인들이 계승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다.

서양 국제법 수용 과정에 이루어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역사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세계는 지난 한 세기간 힘의 우위의 역사 속에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도 승자의 영광만 기억되었다. 이런 상황은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관계, 국제법에 대한 기대감이 약한 것도 어쩌면 여기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지도 모른다. 패자의 논리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때 그 세계는 공생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러일전쟁 직전에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일본국제법학회는 어용성을

강하게 띠었다.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점령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둔 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법 해석의 노선도 국가 실행을 우선하는 실증주의(實證主義)에 편중되었다. 세계의 국제법이 규범주의(規範主義)로 전향할 때도 여전히 자기 변호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 국제법학의 이런 모습은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평화를 지향하는 오늘의 국제관계에서 동아시아 전체의 정신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이 국제법 수용에서 보인 자세는 반대로 오늘의 국제관계에서는 살릴 것이 많다. 조선은 국제법이 강자의 법인 것을 알면서도 외국과 한번 한 약속이면 불리한 것이라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이런 자세는 국제법의 출발점인 자연법 정신의 핵심이자 규범주의의 기초로서 오늘의 국제법 정신에 직통한다. 이런 자세가 과거에는 패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에서는 계승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이 곧 가치의 불멸성이지 않겠는가.

약소국 조선은 또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으로 국제사회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중국과의 구 관계 곧 조공책봉체제의 잔재를 걷어내려고 했다. 그러다가 중국 청조의 반발을 사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27년 만에 끝내 청국과 독립국으로서 1:1의 평등조약인 한청조약(韓淸條約)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국제법 질서 확립의 쪽에서 본다면, 중국식 중화주의의 잔재와 싸운 공이 인정되는 성과다. 일본의 서양 열강과의 불평등조약 개정 못지 않는 의미를 가지는 역사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가 21세기를 공생의 시대로 이끌어 가려면, 지난 세기에 대한 이해, 인식의 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열을 따지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의 장단을 헤아리는 여유를 가질 때, 과거의 패자의 논리에서도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동아시아는 새로운 공생의 시대를 확실하게 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국경을 넘어선 모임이 가능하다면 더욱 희망적이다.

(필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참 고 문 헌

- 김용구, 2001 『세계관 충돌과 한말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 이태진, 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 민두기, 2001 『시간과의 경쟁-동아시아근현대사논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태진, 1994 「조선후기 對明義理論의 변천」, 『아시아문화연구』제10호, 한림대학교.
- 조병한, 「청대 중국의 大一統의 중화체제와 대외인식의 변동」, 위와 같음.
- 민덕기, 「德川幕府의 대외체제와 明清의 교체」, 위와 같음.
- 유인선, 「베트남 阮朝의 성립과 ‘大南’ 제국질서」, 위와 같음.
- 백충현·이태진, 1999 「일본 국제법학회와 대한제국 국권침탈정책」, 『서울국제법연구』6-2, 서울국제법연구원.